시사특집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정 전망과 문제점

초점없는 과녁에 활쏘기

정부는 지난 91년 정부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정치,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배종속적인 노사관계의 재구축과 노동통제의 강화를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악을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전노협과 업종회의 등 민주노조진영과 한편으로 한국노총까지도 정부의 노동통제 강화 기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92년 정기국회에의 개정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4월 임시국회 혹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의 개정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의 이러한 법개정 작업은 현재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서 개정시안의 초안을 거의 완성한 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하여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간과 관련한 법개정,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 등 간할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어 상세히 알수는 없는 처지이다.

그동안 간할적이나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과 그 의도는 민주적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통제 전략을 강화하고 대신 몇가지의 제한,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김영삼 정권의 소위 '신노동정책'을 표현하는 전반적인 노동통제전략은 노총의 상급단체로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주적 노조운영진영의 활동을 위축시켜 개량화된 노총을 안정적인 자신의 노동지배 파트너로 삼아 노동통제를 이룩한다는 것이 그 골자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국정부의 ILO가입에 따른 해외의 압력, 국내 노동운동진영의 노동법 개정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 6)토요일 격주휴무와 8시간 노동을 규정하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그 골자이다.

정부와 민자당이 준비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은 5공시절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분류되어 왔던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등 노동조건을 혹독하게 만드는 개악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언뜻 보기에 지난 물리력을 증심에 놓은 통제체제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의 통제가 완화된 듯이 보이기도 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와 산별노조체계로의 개편 등은 이전과는 달리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시안만을 가지고 노동전략의 일대 전환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정부와 민자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의 배경과 그 의도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정부의 노동통제전략의 핵심은 민주노조진영에 대한 포괄적인 억압과 탄압을 유지한 채 개량주의적, 경제주의적 노동운동노선을 충실히 걷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위상강화와 그를 통한 안정적인 노동지배의 실현에 있다.

한국노총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체계로의 일정한 개편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한국노총에게 교섭권, 타결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선에서는 일반 단위노조에 대한 한국 노총 체제를 통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섭권과 정계권만이라도 상급단체인 산별연맹에게 이전해야만 한다. 또 단위노조에서 상급단체로 납부하는 소위 맹비가 안정적으로 걷히도록 강제하여 산별연맹과 한국노총의 자금을 확보해주어야만 한다.

지난해 한동안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의 중단과 한국노총의 자생력 확보를 주장한 적이 있다. 물론 정부의 총액임금제 실시와 노동법개악에 대한 한국노총의 비협조때문에 나타난 일과성 공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이 함축하는 의미는 크다. 결국 한국노총과 정부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 절묘한 친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십억원의 지원금이 한국노총에 전달되고 정부의 임금정책을 포함한 노동통제정책에 대한 한국노총의 태도가 완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열마전 정부가 주도하여 성사시킨 경제5단체와 한국노총의 임금협상에서 93년 임금인상안을 4.7~9.5%라는 한자리수대에서의 범위율로 극적 타결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바야흐로 유일한 상급단체로서의 배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노총의 개량적 전가가 나타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에서 진행되는 노동법개정은 노동통제의 안정적 강화라는 변형된 통제정책일 뿐이다.

또 이외에도 정부와 민자당은 한국정부의 ILO가입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국내외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ILO의 기본조약마저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핵심조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 등—복수노조금지조항등)에 대한 비준을 늦추는 대신 주변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서도 포괄적으로 제한, 금지하고 있어 노동조합법만의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개입금지조항도 변호사와 노동관계중재기관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인정 등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개정하려 한다든지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 노조활동금지 조항의 개정의도는 바로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애써 무관심한 듯이 넘어가고 주변에 국한한 개정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동관계법 개정의도에 대항하여 노동진영도 한편으로 정부와 재계의 노동법 개악기도를 저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노총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범위확대, 해고예고기간 90일로 연장, 정리해고 규제조항 신설, 노동조합법에서 6급이하 공무원 및 교원노동기본권 보장, 산별체제 전환, 노동쟁의조정법에서 공익사업범위 축소, 쟁의행위 제한, 긁지조항 삭제, 냉각기간 단축, 직권중재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부와 경총의 안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노총은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금지조항삭제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조약이 속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면 노동법개정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채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총의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간 노총이 정부와 재계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유일한 상급단체로서의 배타적인 권리를 누려왔고 따라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노총의 배타적인 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조진영인 전노협, 업종회의, 민주적 대기업노조 등이 모여 결성한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 역시 독자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요약하면 1)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ILO조약 87호, 98호)' 즉각 비준 2)자주적 단결권 확보—복수노조금지조항폐지, 공무원단결금지조항폐지, 제3자개입금지조항폐지, 3)단체행동권 확보—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금지규정 철폐,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4)근로기준법 개악저지—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월차휴가, 생리휴가 폐지 및 연월차 휴가 제한 반대,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반대 5)고용보장법 제정—정리해고 요건 완화 지침 철회 및 해고 규제법 제정, 고용보장위원회 설치, 전면적인 실업자 등록과 고용보험제 실시 등이다.

결국 'ILO공대위'의 노동법 개정안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대다수의 조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경총의 안과 심지어는 한국노총의 안과도 많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한국창조론'과 '고통분담론'에 입각한 강화된 정부의 허위 이데올로기 공세와 이에 맞선 민주적 노조운동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노동법 개악저지및 민주적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한차례 뜨거운 공방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준 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사진은 지난 92년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정주영씨의 국민당창당을 반대하는 모습

배타적 노총 위상강화로 안정적 노동통제효과

개정안 노총 / 공대위

복수노조금지고수 기득권 유지꾀해
ILO즉각비준, 대다수 악법개정요구

한주메모

▲5일—서울상공회의소 발표, '개인서비스료 물가상승 앞장', 지난해보다 12.3%치솟아.

—미국, 러시아에 16억달러 지원계획. 양국정상회담 폐막, 모스크바에 G7사무소 설치 합의.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방침. 민방위국등 폐지축소, 2인 부시장제 검토.

—삼성전철 남경우사장 구속. 열차전복사고 '공법부적절'보고 묵살혐의. 박기석회장도 소환조사키로.

▲6일—러시아 핵비밀도시서 방사능유출. 시베리아의 톰스크7, 당국 '대사고 아니다'주장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극히 심각'주장.

—민주당 1백4명의원, 국민당 13명 재산공개, 투기의혹 곳곳서, 무연고 지역분인·가족명의 부동산, 취득경위누락 불성실 신고 논란소지.

—정부·민자당, 실명제실시 연기발표. 경제악화 우려, 일정 재검토.

—경제5단체장 대기업 과장급이상 임금동결 발표 '고통분담에 호응'합의, 노동계 반발예상.

▲7일—북한 최고 인민회의 개막. 김주식, '민족단결 10대강령'제안. 중립적 통일국가, 정치논쟁 중지 등 밝혀.

—민자,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 △노조정치 참여 허용 △산업별 단위노조 개편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대폭 확대 △변형근무시간제 도입 등.

▲8일—교육부·전교조 복직는의 공식화 발표. 교육부, 화해·신뢰 분위기조성이 우선중요 입장. 전교조, 정부에 조건없이 포용차원 해결 요청.

—정부, 소말리아에 공병파견 유엔에 통보, 2백50명 6월께 파병 결정.

—공정 거래위, 유통 불공정 거래 강력제재방침 밝혀, 빈발업체 형사고발, '감시망' 구축.

—서울시 다가구주택 세금감면제화. 내무부, '건물과표(다가구 주택)가 감산 특례 적용요령 변경지침'발표에 따라 올 6월부터 30%정도.

▲9일—노동부, 의사·교수·기자등 임금동결 유도방침. 호봉승급분 인상률에 포함시키기로.

—서강·한양대 94학년도 본고사 입시요강 확정 주관식위주 출제, 특별전형25%, 20%이내로.

—대한 변협, 변호사 비리 자정착수. 파다 수임료징수 징계결의, '정부차원수사' 나돌아 주목.

—복직·수배해제요구 노동자 1백여명 무기한 단식. 원상회복투쟁위원회, 기독교회관 인권위에서.

독자투고

'투기재산몰수, 비리의원 전원 소환·파면 비대위' 투쟁보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영삼대통령은 4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얼마전 한리서치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영삼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의 개혁의지의 천명과 실행과정이 국민들 사이에 기대심리를 일으키게 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그의 개혁추진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부패를 고위공직자부터 일소시킨다는 개혁의지의 천명으로 재산공개를 진행시킨 김영삼대통령의 일련의 조치를 희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은 이 사안이 사회적인 여론을 동반하고 국민들의 분노의 눈길이 국회에 쏠리자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몇몇 의원의 탈당조치와 의원직 사퇴처리로 마감지으려 하고 있으며, 이제는 정국을 보궐선거로 옮기려 하고 있다. 그 수많은 국회의원중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그들 뿐이며, 국민의 분노의 방향이 단지 그들 몇몇 의원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는가? 국회란 곳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민의 대변자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고통의 지점을 포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부가 아닌가?

그러나 재산공개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절게 나타난 국회의원이 약 80여명이 넘는데 이들이 과연 국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비록 이들 비리의원들이 국민의 손에 의해 뽑혔지만 그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리의원들을 처리하는 김영삼대통령의 수습방식이나 법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국회의원들을 수사하여 구속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3월31일 비가 여름철의 장마처럼 쏟아질 때, 우리학교 노천극장 한 켠에서는 '투기재산 전면 몰수와 비리의원 전원 소환·파면을 위한 수도권 지역 학생 비상대책의 결성식 및 청년학생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3백여명의 수도권 지역학생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비리의원 전원 소환·파면과 투기재산 전면 몰수의 구호를 외치면 그리고 검찰청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또한 언제나 오후 7시에는 명동시민들과 함께 시민·학생대토론회를 하며 그들의 생생한 고통과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벌써 10여일이 넘게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이 자신들이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개혁열망은 정치동로가 협소화된 현 상태에서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이루고자 분투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다시 민주주의의 최선두에 서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길 용
(경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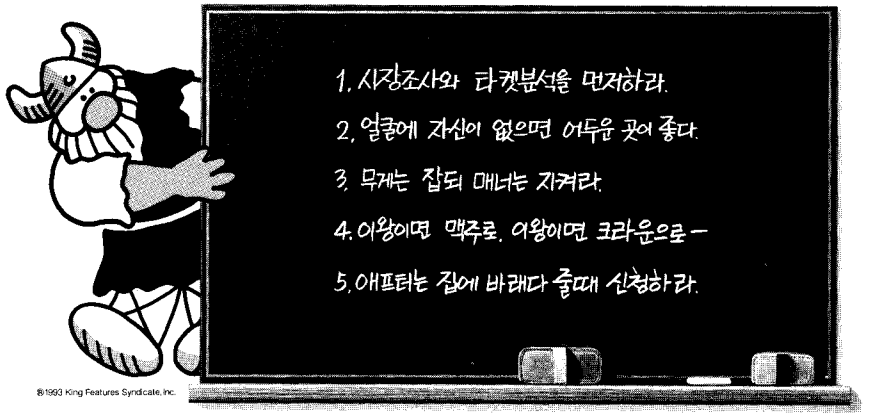
국민의 개혁열망 이끌 조직건설 필요

지난 3월 중순경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도 그의 개혁과정 중의 일부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왔었다. 왜냐하면 그의 이러한 결단이 단순한 결단의 차원이 아닌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낸 것이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40여년이 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사실에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이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온갖 탈법과 악행으로 부를 축적해나갔다는 것에 입이 다물어질 줄을 몰랐었다.

60 1933-1993

성공미팅 5대 전략!



미팅도 알고보면 치열한 머리싸움.
주도면밀한 자만이 훌륭한 파트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은 크게, 건배는 높이 ——
싱그러운 젊음의 만남속에
크라운맥주가 함께합니다.

®1993 King Features Syndicate, Inc.

함께하는 즐거움
크라운맥주